



무한경쟁시대 한국경제 종합적인 발전방향 모색

공기업에 남품하거나 공사를 따기 위해 권력기관에 청탁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를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이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방식의 도입이 공기업 경영혁신과 부정척결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 강봉균 지음 · 박영사 간

한국의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시스템 결합과 1990년대부터 급속히 확산된 금융의 지구촌화 현상이 결합하여 발생한 사대로 만약 1990년대 중반 이전에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기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재벌개혁을 추진하였다면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관치금융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정경유착의 수혜자들, 특혜금융을 받아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사람들 모두가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 4대부문으로 확대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일시적 외환 유동성 위기나 단순한 금융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지난 30여년간의 정부주도에 의한 압축 성장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왜곡되어서 발생한 총체적 경제시스템 위기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기본인식이 구조개혁의 대상을 금융과 기업부문 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노동부문을 포함한 4대부문 개혁으로 확대한 배경이다. 금융구조개혁은 2000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들어선 주식시장 상황과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혁 부진 등이 신속한 구조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저금리시대 투자수익을 보장할 정기배당 실시, 공공 연기금의 증시유입, 부실채권의 시장매각 촉진 등과 함께 특히 정부소유 주식의 조기매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과정은 5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과 6대 이하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특히 재벌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우그룹의 경우 김우중 회장이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법칙이 냉혹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시기를 기대하였으나 이것은 원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지연하는 특정재벌에 구제금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타 재벌에게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요구할 명분을 상실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이유는 대우그룹과 관련되는 50개가 넘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부의 국제금융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보혁명이 경쟁력유지 핵심

정보화시대의 경제발전전략에서 정보혁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신속한 전환 노력은 먼저 전자정부 구현을 서두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기업을 예로 들면 공기업에 납품하거나 공사를 따기 위하여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에 청탁해야 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를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이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탁 자체를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도입이 공기업 경영혁신과 부정척결의 근본 해결대책이 될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보화 경쟁에 달려 있으며,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은 기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치시스템은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은 보장하되,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는 국가발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당까지 선택해야 한다.

둘째로 관료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안정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혁하면서 선진국처럼 투명하고 공정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한국의 관료시스템은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보다는 불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노동운동의 의식과 관행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과 기업 구조개혁은 물론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로 우리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어렵다. 자유기업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확립하려면 기업 경영방식이 민주화되고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국가발전시스템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이 막중하다. 정치권의 변화, 노동운동의 성숙화 등 국가발전시스템의 개혁도 언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화 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선 밖으로는 대외개방을 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으로는 경쟁원리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 메커니즘 확립을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과배분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5~10년 이상의 중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학부모의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의 질 향상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21세기 대표적 첨단기술인 IT, BT, ET, NT 등과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를 공공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신용등급을 올려 줄 것이다. 또 북한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품 생산을 증대할 수 있으며 철도, 도로, 항만의 남북한 연결체계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이 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외 남북한의 국방비 절감으로 남북한 모두 경제개발 투자여력이 증대되고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경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①7

李龍水 (한림대 객원교수)